
국세청 업무보고

2025. 12. 11.

I. '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 추진방향

- ◇ 국민주권정부 첫 해, 새 정부 국정철학을 국세행정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면밀하게 정비하였으며, 2년차에는 이러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세수 관리와 납세서비스 혁신, 조세정의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

① '25년 주요 성과

□ 공약이행을 위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노력

- (세입예산 확보) 성실신고지원,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등 다각적 세수확보 노력으로 전년 대비 세수 증가 및 진도비(추경예산 기준) 상승
* '25.10월(누계) 소관 세수 323.4조원(전년대비 36.4조원 ↑), 진도율 89.2%(전년대비 1.8%p ↑)
- (성실신고 지원) 맞춤형 도움자료 확대*, 인적공제 자기검증시스템 및 부가세 AI 상담 도입 등 납세자 중심 신고환경 구축하여 자발적 신고 유도
* (부가) ^{24년}276만명 → ^{25년}302만명, (소득) ^{24년}115만명 → ^{25년}119만명
- (징수활동 강화) 체납자 실태를 전수확인하여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하는 「국세 체납관리단」 시범운영*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수색
* (기간) 9.3.~ 9.16. (규모) 68명 (대상) 체납자 4,080명 (결과) 3.1억원 현금징수, 69억원 분납약속

□ 국세행정 혁신의 추진기반 마련

- (미래혁신 추진단) 공정·합리·혁신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세행정 주요 분야에 납세자의 목소리*를 반영하고, 속도감 있는 세정혁신을 추진
* 민간 전문위원(16명) 및 성별연령직군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발한 온라인 국민자문단(100명) 등
- (AI 대전환 추진단) '28년 AI 서비스 본격 개통을 목표로 ISP(정보화 전략계획)를 조기 발주하고, 3대 미션*을 구현할 핵심 세부과제 도출
* ① 납세서비스 혁신, ② 공정과세 구현, ③ 세정효율화

□ 다각적 세정지원으로 민생경제의 회복 뒷받침

- (자금 유동성 제공)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환급금 조기 지급, 납부기한 연장, 납세담보 면제* 등으로 자금부담 완화

* '25.7월 신청분부터 '26.12월까지 납세담보 면제기준 7천만원 → 1억원 상향 적용

- (세무검증 부담완화) 신고내용확인 선정 제외(부가가치세·종합소득세) 및 정기 세무조사 유예로 영세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- (납부수수료 인하)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일괄 인하하고, 영세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절반 이하로 인하하여 국세 납부 부담 완화

* (당초) 0.8% (체크 0.5%)→(일반) 0.7% (체크 0.4%), (영세) 0.4% (체크 0.15%)

- (피해사업자 지원) 티몬 피해사업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대손세액 공제 적용에 관한 세법해석을 적극 요청하여 환급금 조기 지급

* (지급대상) 339명 (환급규모) 150억원, 미신청자는 경정청구 개별 안내

□ 징수 기관을 넘어 시장 감시 기관으로 역할 확장

- (불공정 탈세 엄단)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와 불공정 자본거래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사회 전반에 '공정'의 가치 확산

* 생활물가 밀접업종, 시세조종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,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등

- (부동산 탈세 차단) 초고가주택 거래, 외국인·연소자 주택취득 자금 출처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집중 검증으로 비정상 거래 척결

*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, 담보대출·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행위 등

- (범죄 확산 방지) 캄보디아 스캠 범죄 연계 국내 업체에 대한 적시 세무 조사착수 및 범죄수익 은닉 국가의 금융정보*를 확보하여 피해확산 방지

* 한국인 계좌정보를 탈루혐의 검증에 활용

□ 세계로,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의 성장기반 조성

- (해외 진출기업) 우리 진출기업의 어려움이 큰 국가와 상호합의를 우선 실시하고, 해외진출기업 대상 간담회 개최* 등 현장지원 강화
* 해외진출기업 대상 긴급 온라인회의(8월), 국제조세 세미나(11월) 개최
- (AI 중소기업) R&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, 정기 세무조사 유예(4,800여개 기업), 전용상담창구 운영 등 AI 기업 성장 토대 마련
- (국내 주류산업) 시장 진입 여건 완화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및 「K-SUUL AWARD*」 최초 개최로 중소 주류의 해외진출 발판 마련
* 국내 중소기업 175개 업체에서 366종 출품, 2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12종 선정('25.12월)

□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

- (세무조사 관행 혁신) 정기 세무조사 시 조사팀이 기업에 상주하며 불편을 끼치던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혁신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
- (조사과정 관리 철저)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대상을 확대* 하여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극 해소
* 업종별 참관대상 수입금액 기준(現, 도매 6억원·제조 3억원 이하 등)을 대폭 상향 추진
- (영세납세자 권리보호 강화) 국선대리인 선택제* 시행에 따라 지역별·직능별 국선대리인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'국선대리인 지도' 제공
* 홈택스에 게시된 국선대리인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

□ 직무 몰입을 강화하는 근무환경 마련

- (악성민원 대응기반) 악성민원에 따른 업무수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,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'직원보호 전담 변호팀' 출범
- (공정한 인사시스템) 인사분야 게시판을 통해 승진, 전보 등 인사관련 직원 의견을 폭넓게 수집·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운영

2 향후 업무추진방향

□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성공적으로 완수

- (AI 대전환 총력대응) 전용 AI 인프라 구축, AI 전문인력 양성, 예산 확보 등으로 이행 동력을 확보하고, 체계적으로 추진
- (체납관리 전면혁신) 조직·인력 보강 후 체납실태 전수확인을 세심하게 시행하여, 체납자 유형별(생계형-악의적) 맞춤형 체납관리 실시

▶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원관리·조사·체납징수 등 세정의 쏠 과정을 재설계하고, 체납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능동적·적극적 체납관리로 패러다임 전환

□ 조세정의와 납세자 배려가 조화된 합리적 세정운영

- (악의적 탈세 엄단) 모든 납세자가 공정과 정의의 가치 아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, 세무조사·신고검증을 엄정 집행하여 조세정의 확립
- (납세자 친화 세정) 민생경제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노력에 동참, 납세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교한 지원 실시

▶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하면서도,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조세정의와 납세자 배려가 균형 있게 양립하는 세정환경 구축

□ 미래 세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세정역량 및 대응체계 강화

- (글로벌 경쟁력 제고) 복잡한 국제정세 속 실용적·전략적 세정외교와 현장애로 파악을 통해 해외 진출기업·재외국민 지원을 강화
- (재정기반 관리확대) 취약분야 검증 및 신규 세원발굴을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조세지출 관리를 강화하여 세수기반 확충
- (공정·성과문화 확산) 성과 중심의 인사·보상 구조를 설계하여, 국세행정 혁신의 주축인 직원 개개인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 유도

▶ 급변하는 사회·인구구조 및 세정환경 속에서도 중장기 세수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, 조직문화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

II. 중점 추진과제

① 국정운영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의 노력 경주

□ '26년 세수여건 및 관리방향

- (세입예산) '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'25년 추경예산(362.6조원) 대비 +19.2조원 증가한 381.8조원

구분	'25년 추경예산	'26년 예산(안)	'25년 추경 대비
국세청 소관	362.6조	381.8조	+19.2조
총국세	372.1조	390.2조	+18.1조

- (관리방향) 통상 관련 불확실성*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실신고지원 및 체납징수 강화 등으로 소관 세수확보에 총력

* 수출증가율 : ('25년^e) 0.2% → ('26년^e) △0.5% / 수입증가율 : ('25년^e) △0.6% → ('26년^e) 0.5%

② 국세 체납관리의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

□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전(全) 체납자 맞춤형 징수 실시

- (추진방향) 국세청 체납분야 인력과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된 「국세 체납관리단」을 신설하여 체납자 실태확인 후 유형별 맞춤형 징수

- (기간제 근로자 관리) '26년도부터 3년간 총 2,000명의 실태확인원*을 투입하여 체납자 전수(133만명, 110조원)에 대한 실태확인 실시

* (역할) 체납사실 안내, 생활실태 확인, 납부의사 및 납부계획 확인 등

- 시행초기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고용창출*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'26년도 채용 규모 확대 추진

* 청년·은퇴자·경력단절여성 등을 균형 있게 선발하여 다양한 집단에 일자리 제공

- (체납분야 조직보강) '25년 하반기 수시직제를 통해 증원된 인력에 더해 조직 내 타 분야 인력을 재배치하여 총 200여명의 인력을 체납분야에 보강
 - 본청 내 체납관리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, 지방청·세무서에 기간제 근로자 관리인력, 기획분석·추적조사 전담인력 총 180여명 증원
 - (세심한 현장확인)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일관성 있는 실태확인을 실시하고 철저한 사전교육으로 불필요한 민원 최소화
 - 실태확인 전 전화·문자로 미리 안내하여 방문 성공률을 높이고, 체납자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*
- * 제3자에게 체납 사실 안내 금지, 사전 약속 없는 야간휴일 방문 금지, 체납안내문 노출 금지 등

□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세정지원

- (생계 곤란형 체납자 지원)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는 체납액 납부의무를 면제*하고 지자체 등에 복지서비스 연계
 - * '25.1.1.이전 발생 종소세·부가세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무재산·폐업자(28.5만명, 3.4조원)
- (징수특례 확대)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대상을 확대¹⁾하고 요건을 완화²⁾하여 영세 사업자 경제적 재기 지원
 - 1) (종전) 사업자등록자, 취업자 → (확대) 특수형태근로종사자(예술인, 배달라이더 등)까지 확대
 - 2) (종전) 종합소득세·부가가치세 합계 체납액 기준 5천만원 → (완화) 8천만원으로 상향

□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악의적 고액·상습체납자 강력 대응

- (기획분석 강화) 각 지방청 내 고액체납자의 납부기피 혐의와 신종 은닉수법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획분석팀 인력을 증원하여 추적조사 선정 대폭 확대
- (추적전담반 확대) 세무서 전담반을 소관서로 확대하여,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을 거친 고의적 납부기피자 등에 대한 전방위적 추적관리 실시
 - * 추적전담반(관서) : ('22) 8 → ('23) 19 → ('24) 25 → ('25) 73 → ('26) 133(전국 소관서)
- (특별기동반 운영) 재산은닉 전 강제징수를 위해 고액체납 발생 즉시 '실태분석 → 추적조사 → 체납징수'까지 논스톱 실시하는 고액체납 신속대응 모델 수립
 - * 서울청·중부청 각 2반, 나머지 5개 지방청 각 1반 설치(1반당 6명씩 총 54명)

③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「국세행정 AI 대전환」

□ 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세계 1위 AI 국세행정 구현

- (추진 방향) ‘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’(국정과제 24)을 위해 ’27년 본사업 진행을 목표로 「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」 수립 및 추진
 - ① 납세서비스 혁신, ② 공정과세 구현, ③ 세정 효율화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세정 프로세스를 전면 혁신하되, 과세정보 보안체계 구축 철저
 - AI 세금컨설팅 제공, AI 탈세적발·체납관리시스템 구축 등 납세편의 개선 및 세입 확충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조직 차원의 모든 역량 집중
 - (추진 일정)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, ’26~’27년 AI 과제 개발 및 ’28년 본격적인 AI 서비스 개통 추진
 - (진행현황) ’25년 ISP(정보화전략계획)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며, ’26년 ISMP(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) 수립을 위한 예산안 심의 완료
 - (예산확보) 사업예산에 대해 ’26년 상반기 내 기재부와 협의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’27년 본사업 착수 추진
 - (과제개발) 내부 컨트롤타워로 「AI 대전환 추진단」을 구성·운영하고, AI 대전환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세부과제(100여개)를 단계적으로 발굴·추진
- * 「미래혁신 추진단」 외부위원, 「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」을 통해 전문가·납세자 의견 수렴

연도	추진 전략	추진 과제
'26년	▶ ISMP 수립 ▶ AI 시범과제 개발	▶ 예타 관련 절차 진행 후 신속한 ISMP 수립 ▶ 핵심 세부과제 중 중요과제 시범 구축 ▶ 초기 확보한 GPU를 활용하여 홈택스 AI 검색 추진
'27년	▶ AI 인프라 도입 ▶ AI 활용 핵심과제 개발	▶ 납세서비스 혁신(AI 신고서 어시스턴트, AI 세무컨설팅 서비스 개발) ▶ 공정과세 구현(AI 체납관리 어시스턴트, AI 탈세적발 시스템 개발) ▶ 세정 효율화(AI 업무지원 시스템, AI 자료처리 어시스턴트 개발)

□ 국세행정에 특화된 AI 인프라 구축

- (전용 인프라 구축) 과세정보 보호와 국세업무에 특화된 전용시스템 개발을 위해 별도 폐쇄망 기반의 독자적 인프라 구축을 추진
 - ISP·ISMP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 학습·상담용 GPU 서버 등 AI 인프라 구조를 설계하고('26년), 국세행정 AI 인프라 본격 구축('27년)
- (생성형 AI 도입) 국내·외 최신 생성형 AI 모델(Foundation Model)을 벤치마킹하고 기술검증을 실시하여 국세청에 최적화된 AI 모델 도입

□ AI 시대에 걸맞은 정보보안체계 확립

- (보안가이드라인 수립) AI 시스템 운영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, 민감정보에 대한 접근범위 설정, AI 편향*(bias)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
 - * AI가 특정정보 및 특정집단에 대해 불공평하거나 왜곡된 판단을 내리는 현상
- (보안시스템 고도화) 화이트 해커¹⁾를 활용하여 해킹 대응을 강화하고, 개인정보유출 실시간 관리 및 AI 보안감사²⁾로 내부 자료유출 방지
 - 1) 해킹기술을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정보보안 전문가
 - 2) AI가 일반적인 패턴을 벗어난 내부사용자의 자료조회 유형을 적발하는 감사시스템

□ AI 대전환을 이끌어갈 전담조직 신설 및 인재 육성

- (AI조직 신설) 현재 임시조직 형태의 AI혁신추진 TF를 내년 정규조직 형태의 인공지능혁신담당관으로 격상하여 AI 대전환 추진동력 확보
 - 기존 정보화관리관(현원 248명) 산하에 AI혁신 업무를 총괄할 심의관* 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전담할 국세정보화개발센터(직속 부속기관) 신설 추진
 - * AI 총괄기획 부서, AI 과제개발 부서, 빅데이터 담당부서를 관리·지휘할 국장급 보좌기관
- (AI인재 육성) 석·박사급 외부전문가 영입을 추진하고, 세정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생성형 AI 실무사례를 발굴할 AI크루*(Crew) 300명 선발
 - * 본청·지방청·세무서 직원으로 구성하여 국세청 내 'AI붐(Boom)' 조성에 활용
- AI 인재를 선발하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대학원 위탁·전문기관교육 등 맞춤형 AI 교육과정을 주관할 'NTS AI College' 프로그램 운영

4 **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**

□ 배려와 안내 중심의 ‘자상한 세무조사’ 추진

- (시기선택제 시행) ‘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골라서’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기선택제를 실시,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
- (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)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*을 공개하여,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하고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해 조사부담 완화
* (예) 고용증대세액 과다공제, 대표자 등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신고 누락 등
- (신고실수 방지) 이전 조사적출사항을 신고도움자료로 신고 전에 홈택스로 제공하여 동일한 유형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*
* (예) [적출내역] 과다경비 부인 → [안내문구] “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비는 손금 산입 불가”

□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세정환경 제공

- (수출기업 경쟁력 제고) 관세피해 수출기업과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·철강·건설업 기업에 납기연장* 등 세정지원 실시
* 법인세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(중간예납 2개월)
- (신산업 성장지원) 「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」를 통해 AI, 바이오 등 신산업 기업에 대해 각종 컨설팅 우선 처리 및 전용상담 제공
- (현장의견 청취) 기업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경제단체와의 간담회*를 실시, 현장의 애로·건의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개선방안 마련
* 대한상공회의소(3월), 중견기업연합회(5월), 중소기업중앙회(8월) 등 예정
- (우리 술 육성)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는 「K-SUUL AWARD」 개최를 정례화하고, 수상 업체의 현장방문을 통한 맞춤형 수출지원책 수립
 - 국제 주류박람회*에 「대한민국 K-SUUL관」을 설치하여 해외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하고, 대형유통사와 협업하여 해외시장 개척지원
* 주류 업계·협회 등과 협업, 아시아 최대 「홍콩 비넥스포아시아 국제 주류박람회」 참가(26.5월)

□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따뜻한 세정 실현

- (세금애로 해소)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공제·감면 등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안내·상담하는 「중소기업·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*」 신설
* 민원수요, 관내 소상공인 비중,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청별로 시범운영 후 확대
- (국민중심 세법해석)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*, 산모·신생아 돌봄 바우처 면세 등 합리적 세법해석으로 취약계층의 과중한 세부담 해소
* 소득세 환급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소 107억원의 추가지원 효과 기대
- (장려금 환수 최소화) 당해연도 소득·재산자료를 조기 수집,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분 장려금 지급을 유보하여 환수발생 축소

□ 국세데이터 개방·활용 확대로 민생정책 수립 지원

- (경제지표 제공) 국가·지자체가 실물경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개·폐업, 신용카드 현황 등 경제지표를 252개 시군구로 세분화하여 매일 제공
- 국세통계포털(TASIS)에도 월간 지역 경제지표 메뉴를 신설하고, 시각화한 통계 콘텐츠를 공개하여 통계이용자의 편의성 증진
- (청년 창업통계 공개) 청년창업자와 청년정책에 도움이 되는 통계를 발굴·공개하고,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간담회 실시
* (예) 지역별 청년 창업 선호업종, 청년사업자 매출 추이 등을 시각화한 콘텐츠

□ 서비스 혁신을 통한 납세편의 획기적 향상

- (절세혜택 안내)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·감면항목을 알려주는 「절세 혜택 도움자료」를 유형별로 안내하고,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
- (신고편의 향상) 복잡한 세법 규정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양도소득세·상속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편
-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자동채움 서비스¹⁾를 확대하고, 사망신고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²⁾ 개발

1) (현행) 등기자료 상 부동산 → (확대) 분양권·입주권 등 기타자산 추가

2) 행안부의 상속재산 조회서비스를 홈택스와 연계하여 조회자료를 토대로 신고서 자동채움

5 반사회적 탈세 척결로 조세정의 구현

□ '26년 세무조사 운영방향

- (조사규모 탄력운영) 조사규모*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대내·외 경제여건과 인력 상황,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
* ('22년) 14,174건 → ('23년) 13,973건 → ('24년) 13,980건 → ('25년) 14,000건 내외
- (영세납세자 부담완화)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은 세무검증에 대한 불안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 세무조사 유예(~'26.上)
- (국민공감형 세무조사 실시) 국민들이 정당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야는 적기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

□ 반사회적 탈세 척결

- (불공정 자본거래 엄단)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하거나, 편법적인 자본거래로 부를 대물림하는 변칙 상속·증여 집중 점검
 - ▶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,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누린 시세조종 세력
 - ▶ 불공정 합병·분할, 불균등 유상증자·감자 등을 편법승계 수단으로 활용한 탈세
- (민생침해 탈세 근절) 서민 대상 불법·불공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거나 생활밀접 업종에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며 물가를 인상시키는 행위 등 검증
 - ▶ 노동자 임금을 체불하거나, 국민 안전은 무시하며 사익만 추구하는 악질 사업자
 - ▶ 거짓 원가로 이익을 조작하고 불투명한 유통과정으로 세부담을 회피하는 악의적 탈세
- (지능적 역외탈세 대응) 고도화되는 다국적기업의 부당한 소득이전 행위와 초국가 범죄단체의 범죄수익 편법 송금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 조사
 - ▶ 사업장 쪼개기 등 국내에서 본질적인 활동을 수행하면서 고정사업장을 회피하는 행위
 - ▶ 가상자산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활용하여 범죄수익을 국외로 빼돌리는 행위
- (온라인 신종탈세 차단) 가짜뉴스 등 온라인 환경을 교란하는 유튜버 등의 탈루행위를 검증하고, 온라인 신종·호황 업종의 탈세 대응 강화
 - ▶ 자극적 유해 콘텐츠를 제작·판매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수익을 은닉하는 유튜버
 - ▶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티켓 재판매, 대리 티켓팅 등으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암표업자

□ 국민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 근절

- (세심한 모니터링 실시) 부동산시장의 가격 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찰하여 시장교란 부동산 탈세에 선제적 대응
- (검증 강화) 강남4구·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, 매매거래 위장·저가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 집중 조사

▶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부담부 증여 등 채무를 이용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행위
▶ 인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하여 저가 신고하는 행위

- (대응체계 확충) 「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」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, 범정부 부동산 감독기구* 설립에 인력·행정 적극 지원

*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·수사 총괄·직접수행, 정보공유 역할

□ 탈세정보의 과세활용도 제고로 숨은 세금 발굴

- (탈세제보 재점검) 최근 3년간 누적된 탈세제보를 본·지방청 합동으로 재점검하고, 탈루유형을 발굴·분석하여 세무조사 등에 활용

* 탈세제보 과세활용률(%): ('20) 19.4 → ('21) 19.2 → ('22) 17.7 → ('23) 16.5 → ('24) 16.3

- (정보관리 고도화) 정보자료별 연관된 탈루행태를 해시태그(#)로 관리하고, 분석이 제한된 사진파일 등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탈세정보의 활용도 제고

□ 공익법인 신고·사후관리 강화로 투명성 제고

- (공시책임성 확보) 기부금 사용내역 통계보고서를 발간하고, 재공시 수정 추적시스템*을 도입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국민 감시를 강화

* 결산서류를 수정하여 재공시하는 경우 변경이력을 한눈에 파악 가능한 시스템

- (검증 강화) 사회적 관심이 높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무위반 항목 점검 등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공익법인을 철저하게 검증

▶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공익자금 부당유출
▶ 종교단체에 출연한 부동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자 수익사업에 활용

6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빈틈없는 세원관리

□ 공제·감면 실태관리 강화로 세입기반 확충

- (조세지출 항목 점검) 소관 조세지출 집행 현황을 점검, 현장 관점에서 특정집단에 혜택이 집중되거나 효과가 미미한 항목 발굴·개선건의
 - (공제·감면 사후관리) 보유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신고검증을 강화하고, 악용사례*를 지속 발굴하여 부당한 공제·감면을 철저하게 추징
- * 사망자·소득기준 초과자 등 부당 인적공제, 불법 브로커를 통한 연구·인력개발비 부당 공제 등

□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한 인프라 강화

- (컨트롤타워 신설) 가상자산 시장변화에 신속·체계적으로 대응하고, 부서별 분산된 업무(세원관리·조사 등)를 조정하는 총괄부서(디지털자산총괄과) 신설 추진
 - (인프라 구축) 수집한 가상자산 정보¹⁾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분석시스템²⁾ 구축하고, 가상자산 거래추적·분석을 위한 고도화된 프로그램 도입·개발
- 1) 거래소가 제출하는 개인·법인 거래명세서 및 집계표, 블록체인 공시자료(일부) 등
2) 주요기능 : 인별 거래정보 제공, 탈루혐의 분석, 거래 시각화, 조사지원 등
- (역외정보 수집강화) 암호화자산 자동 정보교환 제도*(CARF)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예산 및 인력 확보, 교환시스템 개발 등 추진
- * 암호화자산 사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51개 협약국 간 교환(27.9월 최초실시)
- 스테이블코인 동향,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유출 등 역외정보 수집도 철저

□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탈세조력자 엄단

- (불성실 대리인·플랫폼) 허위·과장광고로 납세자를 현혹하여 탈세를 조장하는 불성실 세무대리인 처벌 강화 및 세무플랫폼 감독규정 신설
 - (미등록 PG) 조직적으로 세금탈루를 조장하는 미등록 PG에 대해 가맹점 매출자료 제출의무*를 도입하고, 금융감독원을 통한 고발조치 방안 마련
- * (기존)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맺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G만 제출의무 부여

7 실용적 세정외교를 통한 진출기업 지원 및 국내투자 촉진

□ 전략적 세정외교로 우리기업 및 과세권 보호 강화

- (실용외교 전개) 주요 교역국(미·중·베 등)과 양자교류를 지속 강화하고, 최근 협력 필요성이 증가한 동남아·유럽 주요국과는 새롭게 추진
 - 파급력 있는 다자회의체에 참여해 주요국의 세정 책임자와 직접 소통하며 체납징수·정보교환·상호합의 등 주요 분야 공조 강화
 - * 자산은닉 위험이 큰 국가와 정보공조 강화 및 징수공조를 위한 MOU 체결 협의
- (국가간 이중과세 해소) 공격적 과세로 진출기업의 어려움이 큰 국가에 상호합의 역량을 집중하고, 성장동력을 위한 미래전략 산업의 APA* 우선 추진
 - * (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) 국가간 이중과세 위험을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

□ 해외 진출기업과 교민에 대한 촘촘한 세정지원

- (세무설명회 개최) 현지 세무설명회는 세정환경 변화에 맞춰 대상국가·콘텐츠를 다각화하고 원거리 지역은 비대면 개최하여 빈틈없이 지원
 - 현지 과세당국이 직접 참여하는 기업설명회* 등을 개최하여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진출기업의 세무리스크를 완화
 - * '26년 중 브라질, 멕시코에서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 추진
- (진출기업 세정지원) 진출기업 밀착 지원과 최일선 외교 채널 확보를 위해 주요 수출시장, 교민 다수 거주지역 등 보호 필요성 큰 지역*에 국세관 신설 추진
 - * 유럽연합(3위 수출시장), 캐나다(교민 수 5위, 최근 현지 투자 급증)

□ 재외국민 복귀 및 외국계기업 국내투자 유치 확대

- (재외국민 복귀 지원) 과세 우려로 귀국을 주저하는 재외국민의 국내 복귀(U-turn) 세금 애로를 상담하는 '지금 귀국하러 갑니다' 프로젝트* 추진
 - * 거주자 판정, 양도·상속·증여세 등 재외국민의 세무 관련 주요 관심사항 개별 상담
- (해외자본 투자 유치) 주요 외국 상공인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, 국내 투자확대 외국계기업*에는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실시
 - * 전년 대비 10%(중소기업) 또는 20%(중견기업) 이상 투자금액을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 등

〔 국세청 2026년 업무추진방향 〕

국민주권정부 첫 해, 새 정부 국정철학을 국세행정에 정착시키기 위해 **제도와 시스템 정비**
 >>> 2년차에는 **가시적 성과**로 이어지도록 **세수관리·납세서비스 혁신·조세정의 구현**에 박차

1 국정운영 **재원의 안정적 확보**에 최선의 노력

- '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381.8조원 ('25년 추경대비 +19.2조원 증가)
- 성실신고 지원 및 체납징수 강화로 세수확보에 총력

2 국세 **체납관리**의 전 과정을 **획기적으로 개선**

- 체납관리단 출범: 현장중심의 능동적·적극적 체납관리로 전환
-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경제적 재기 지원(납부의무 면제, 지자체 복지서비스 연계 등)
- 악의적 고액·상습 체납자는 특별기동반·추적전담반 운영으로 강력대응

3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**「국세행정 AI 대전환」**

- 납세서비스 혁신, 공정과세 구현, 세정효율화 등 세정 프로세스 전면 혁신
- ('25) ISP 수립, ('26) 예타·ISMP 수립, ('27) 본사업 착수, ('28) 개통
- 국세청 독자 인프라·생성형 AI 도입, 전담부서 운영·전문인력 양성

4 **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**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

- 정기조사 시기선택제,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
-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(중소상공인·신산업 세정지원), 국세데이터 개방
- 국민중심의 합리적 세법해석으로 취약계층의 과중한 세부담 해소

5 **반사회적 탈세 척결**로 조세정의 구현

- 서민대상 불법·불공정행위(폭리 취하며 물가안상하는 생활밀접업종, 임금체불 사업자 등)
- 주가조작, 변칙 상속·증여, 가상자산 활용한 지능적 역외탈세
- 시장교란 부동산 탈세, 기부문화 저해하는 불성실 공익법인

6 재정누수를 **차단**하는 빈틈없는 세원관리

- 조세지출 집행 현황 점검, 공제·감면 악용사례 차단
- 가상자산 탈세 대응(전담조직 신설, 거래추적 프로그램 개발,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준비)
- 고액소송 대응역량 강화로 과세권 수호(대리인 공개경쟁방식 도입 및 성공보수 대폭 상향)

7 **실용적 세정외교로 진출기업 지원** 및 **국내투자촉진**

- 이중과세 해소(양자교류·다자회의체 참여로 공조강화, 전략적 APA 실시)
- 주요 수출시장·교민 보호 필요성이 큰 지역에 국세관 신설
- 재외국민 국내복귀(U-turn) 지원 및 외국계 기업 국내투자 유치